DOI: http://dx.doi.org/10.31008/MV.45.1

특집 논문

박정희 시대 민족주의적 통치성과 대항 담론 및 저항 주체*

홍태영 _국방대학교

논문요약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통치 세력과 저항 세력 모두에게 유용한 정치적 동원 자원으로 존재해 왔다. 4·19와 5·16을 거치면서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민족주의는 근대화를 통한 '잘살기'와 부국강병이 목표였다는 점에서 여타의 자유주의 세력들도 동의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였다. 민족주의, 특히 경제적 민족주의는 남한 사회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일정한 동의를 받을 수 있었고, 그러한 민족주의는 국민의 삶 전체를 규율하기에 이른다. 그것이 이른바 '민족주의적 통치성'의 형성이었다. 박정희의 민족주의에 대항해 형성된 저항 담론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나는 박정희 정부가 추진한 경제적 민족주의를 통해 경제개발이 만들어낸 한국 경제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에 대한 추구의 시도(2절)이며, 다른 하나는 박정희의 민족주의 및 박정희가 추구한 '민족적인 것'에 대한 비판과 대항 담론의 형성(3절)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항 담론이 민족주의적 통치성의 자장 속에 위치했지만, 서서히 박정희 시기 형성된 대항 담론은 이러한 대항 세력을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주체에 대한 탐구(4절)로 이어지면서 균

* 세심하고 중요한 심사평을 해주신 세 분의 심사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다만 심사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며, 차후 연구를 통해 보충할 수 있도록 하겠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열을 발생시킨다.

■ **주요어:** 민족주의적 통치성, 경제적 민족주의, 박정희, 민족경제론, 민족문학

1. 서론

한국에서 민족주의는 통치 세력과 저항 세력 모두에게 유용한 정치적 동원 자원으로 존재해 왔다. 4·19와 5·16을 거치면서 박정희 정권이 내세운 민족주의는 근대화를 통한 '잘살기'와 부국강병이 목표였다는 점에서 여타의 자유주의 세력들도 동의할 수 있는 이데올로기였다. 민족주의가 이미 19세기 말부터 외세와의 만남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고, 일제 식민지 경험을 통해 저항 이데올로기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면, 이후 남한에서의 독자적인 국민국가 형성 과정을 통해 국민의 삶 전체를 규율하기에 이른다. 그것이 이른바 '민족주의적 통치성'의 형성이었다.[1] 5·16 직후 상당수의 4·19 참여 지식인들이 민족주의 혁명으로서 군사쿠데타를 지지할 만큼 민족주의는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등장했다. '민생고 해결과 경제적 근대

1) 박정희 시기는 남한에서 국민국가 형성이 본격화된 시기이다. 해방과 한국전쟁, 제1공화국의 시기는 냉전과 전쟁, 분단 등 혼란의 시기였다고 한다면, 박정희 시기에 들어서 통일을 먼 미래의 일로 미루고 남·북한 모두가 각자의 방식대로 본격적인 국민국가 건설의 길로 들어섰으며, 그 과정에서 남한은 민족주의적 통치성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족주의적 통치성에 대한 이해는 졸고(홍태영 2018; 2019; 2020) 참조.

화'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혁명 공약'은 민족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있었으며, 4·19 이후 혼란과 정치적 무능력 속에서 5·16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물론 상당수의 자유주의자들은 1964년 – 한일국교정상화 등 – 을 기점으로 서서히 박정희 정권과 거리를 두면서 비판 세력으로 전화되지만, 결국 1960년대 시대적 과제로서 남한에서 국민국가 건설 과정에서 민족주의적 동원과 통치 실천을 거스르기는 어려웠다. 자유주의 세력들 역시 민족주의를 통한 국민국가 건설의 목표를 공유하면서 자유주의적 그리고 민주적 길을 강조했다고 볼 수 있다. 해방 이후 탈식민과 분단 극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길은 통일된 국민국가의 건설이었을 것이고, 이를 위해 우선 남한의 부국강병, 즉 부유한 국민국가 건설이 필요했다. 결국 민족주의는 당시 모두가 공유할 수밖에 없는 공통의 기반으로 작동하면서 경제개발의 국민 주체를 호명하고 그들의 삶과 가치를 규율하는 '통치성'을 형성했다.

하지만 1950년대만 하더라도 '자유'와 '민주주의'는 민족주의를 불신하고 그로부터 거리를 두는 방식을 통해 강조되었다(김재준 1953).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민족은 불신의 대상이 되었고 또한 민족주의는 후진적인 것으로 치부되거나 극복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권보드래 2010, 209). 또한 관제 이데올로기로 등장한 일민주의 때문에 민족주의는 금기시되는 언어였다(서중석 2005). 하지만 4·19와 함께 '민족'은 다시 사회적 담론의 중심에 등장했고, 박정희 정권 시기에 민족 및 민족적인 것은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민족적인 것'은 '국가적인 것'으로 치환되었고, 이때의 국가란 북한과 대립하는 남한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박정희 체제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의미했다(서은주 2014, 217). 따라서 박정희 체제에 저항하는 이들은 '민족적인 것'에 규범성을 부여하면서 박정희 정권의 '반민족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결국 박정희 정권과 저항 세력의 싸움은 '누가 진정한 민족주의자인가?'를 둘러싼 싸움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1960년대 말부터 3선 개헌 그리고 유신으로 이어지는 박정희 정권의 반민주주의적/반자유주의적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사상계』의 자유주의 지식인, 박현채의 민족경제론, 한국사학자들의 민족사학운동, 백낙청의 민족문학론 등은 박정희 정권의 '민족적인 것' 및 민족주의의 '허구성'을 드러내면서 자신들의 '진정한' '민족적인 것'을 대비시켰다. 따라서 이들은 자유, 민주주의, 민족 자립, 자립 경제 등의 잣대를 통해 박정희 민족주의가 '반(反)'민족주의적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진정한' 민족주의를 내세웠다. 또한 박정희 정권의 반민주성에 대한 비판은 정권의 반민족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문지영 2011, 229). 민족자존과 민족 자립에 반하는 정권은 곧 반민주적 정권이라는 평가가 공유된 것이다. 결국 이 시기 민족주의는 '규범적' 잣대로서 작동했다.

3선 개헌 이후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김대중 후보에게 90만 표 차의 신승을 거두었고,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겨우 과반을 얻음으로써 민심의 이반을 읽을 수 있었다. 정치적으로 표현된 선거는 물론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균열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970~1971년 사이의 노동쟁의는 165건에서 1,656건으로 열 배 이상 증가했다(김형아 2005, 216;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984). 1970년 11월 13일 전태일 분신 사건이 있었고, 7월 대규모 폭동 사태로 발전한 광주대단지 사건, 9월 한진상사 파월 노동자 400명의

KAL 빌딩 난입·방화 사건이 있었다. 1971년 7월에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는 '사법 파동'이 일어났고, 8월에는 대학교수들의 자주화 선언, 10월에는 지학순 주교를 중심으로 부정부패 규탄대회가 열리면서 반독재 투쟁이 전개되었다. 다양한 차원에서 박정희의 민족주의 및 민족적인 것에 대한 이견들이 표출되었고, 그것은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기도 했다.

그간 박정희 민족주의는 물론 박정희 정권의 대항 담론으로서 민족주의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존재한다. 박현채 민족경제론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의 연구(양우진 1994; 장상환 2001; 조석곤 2001; 이병천 2007; 안현효 2008; 정건화 2008; 류동민 2015)가 다수 존재하며, 주요한 논의는 경제학이라는 측면에서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이 갖는 시대적 의의와 한계를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백낙청 등의 민족문학론에 대한 연구는 인문학자들에 의해 무수히 많이 연구되었으며, 주요하게는 '민족문학론'이라는 하나의 비판의 도구로서의 의미를 강조한다(강정구 2006; 2009; 권보드래 2010; 조영일 2012; 김윤식 2013; 손유경 2015; 송은영 2015). 그리고 그 시기 민족사학사에 대한 연구들(박찬승 1994; 이윤갑 1995; 김정인 2010; 이영호 2011; 이상록 2012; 김인걸 2017)은 역사학계 내부는 물론 '한국사' 혹은 '한국학'이라는 차원에서 아직도 논쟁 중이다. 또한 1970년대 민족문화 및 대중문화에 대한 연구(신현준 2004; 김수진 2008; 김원 2012), 대항 담론(박명림 2008; 문지영 2012), 서발턴 연구(김원 2011) 등은 상대적으로 취약하지만 최근 미시사적 접근 혹은 담론 연구 차원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적 통치성'이라는 개념틀을 통해 박정희 시기를 포착하려는 시도는 극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소수(송은영 2014; 홍태영 2018; 2019; 2020)이며, 또한 그 개념틀을 통해 대항 담론의 지형을 이해하고자 하는 시도는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론적 시도로서 민족주의적 통치성을 통해 박정희 시대의 대항 담론의 지형도를 그려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것은 민족주의라는 '진리'가 어떠한 지적 도구와 기술적 절차를 통해 생산되는가를 보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통치권력은 어떠한 방식으로 민족주의와 관련한 지식을 생산하고, 나아가 민족주의적 '주체'를 생산하는가, 그리고 민족주의적 통치성은 대항 담론을 통해 어떠한 방식으로 민족주의적 (反)주체를 생산하는가의 문제와도 결합된다.

이를 위해 박정희의 민족주의에 대항하여 형성된 저항 담론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살펴볼 것이다. 하나는 박정희 정권이 경제적 민족주의를 통해 추진한 경제개발이 만들어낸 한국 경제에 대한 비판과 그 대안 추구의 시도(2장)이며, 다른 하나는 박정희의 민족주의 및 박정희가 추구한 '민족적인 것'에 대한 비판과 대항 담론의 형성(3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항 담론이 민족주의적 통치성하에 위치했지만, 서서히 대항 담론은 새로운 주체에 대한 탐구(4장)로 이어지면서 통치성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2. 자립 경제에 대한 퇴행적 희망 혹은 미망

1) 4·19와 5·16의 차이

박정희 정권에 핵심적인 작업은 경제적 민족주의를 통한 경제개발과 국민경제의 확립이었고, 그것은 또한 국가주도형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조국 근대화'의 완성이었다. 박정희는 5·16 이후 '근대화'야말로 "5·16 군사혁명이 국민혁명을 완성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이자 "민주혁명의 목표"라고 제시했다(박정희 1962, 100). 조국 근대화의 구체적인 과제로 첫째, 반봉건적/반식민지적 잔재로부터의 해방, 둘째는 경제적 자립, 셋째는 건전한 민주주의의 재건을 제시했다(박정희 1962, 100-103). 여기에서 박정희는 '건전한 민주주의'란 "서양식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우리 사회와 정치 형편에 알맞은 민주주의"이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행정식 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박정희 1962, 178). 조국 근대화의 중심에 있었던 자립적 국민경제의 건설이라는 과제를 박정희 정권은 국가 주도의 산업화 정책을 통해 '지도받는 자본주의 체제'라는 개념으로 제시했다.[2] 익히 알려져 있듯이 박정희 군사정권에 제시된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초안에는

2) 『제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 〈1962-1966〉』에서 '기본 목표'를 "모든 사회경제적 악순환을 시정하고 자립 경제의 달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있다고 명시하고, 계획의 방침으로는 "계획기간 중 경제의 체제는 되도록 민간인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자유기업의 원칙을 토대로 하되 기간 부문과 그 밖의 중요 부문에 대하여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거나 또는 간접적으로 유도 정책을 쓰는 '지도받는 자본주의체제'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대한민국 정부 1962, 15-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내포적 공업화를 통한 자립 경제의 달성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1962년 통화개혁 실패와 흉작으로 위기를 맞았고 그와 함께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분업체계를 구상하던 미국의 압력으로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수입대체산업화 전략의 포기를 요구한 미국의 압력이 반영되어 종합제철, 종합기계제작 등의 대규모 사업이 배제되었고, 투자재원의 조달 방식에서도 변화가 이루어졌다(박태균 2007). 결국 새로운 보완계획은 '외자 의존적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이었다.

1960년대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추진된 조국 근대화라는 과제에 대해 사회 전반은 충분히 호응하는 분위기였다. 분명 박정희 정권 초반기의 경제발전을 위한 추진 동력이 쿠데타의 정당성 확보라는 차원과 더불어 박정희의 민족주의적 성향과도 결합되며 그것에 대한 호응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3] 4월혁명의 완수는 경제 부흥과 경제 자립에 있다는 담론이 유포되었다. 고려대 학생들은 4·18 1주년을 맞아 "우리는 이러한 한국민의 제일 과제인 자립 경제를 촉진함에 있어 재벌 중심의 고전적 자본주의보다는 국가적 경제계획을 기간 요소로 하는 강력한 경제체제가 한국의 후진성에 비추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탈후진'을 목표로 국가주도의 경제개발론을 지지했다(장준하 1961, 35). 4·19 세력은 5·16을 거부하지 못했다. 그것은 4·19의 완성이 경제개발을 통한 근대화의 촉진이었고, 그

3) 1960년 4·19혁명 이후 민주당 정권에 대한 실망과 '새로운 지도자'에 대한 열망, 그리고 그에 대한 박정희의 부응은 우연적인 결합만은 아니었다. 당시 1960년대 초반 『사상계』에 나타난 영웅적 지도자를 열망하는 글들을 보면 당시 시대적 분위기를 짐작할 수 있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하는 쿠데타 역시 이미 공개된 비밀이었다.

것을 통한 민주주의의 완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5·16 직후 일부 지식인들은 아유브 칸의 '기본적 민주주의'나 수카르노의 '교도적 민주주의'를 긍정하며, 5·16쿠데타 세력이 지도성과 통제를 가미한 '후진국형 민주주의'를 실천할 것이라고 기대했다(신일철 1961, 277-278).

박정희 정권 시기 대표적 비판 세력이면서 자유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상계』 지식인들의 경제발전에 대한 관점을 본다면 그들과 박정희 정권과의 시각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1950년대 말부터 『사상계』의 경제팀에 의해 제안된 경제개혁의 방향은 공업 중심의 균형성장론과 원조의 다각화를 통한 경제 교류의 확대, 자유경제보다는 정부 주도의 계획된 경제체제를 선호하면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정진아 2012). 전체적으로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는 국민국가 건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중심적 과제로서 경제적 근대화의 방식에서 민족주의라는 틀을 가지는 것이 당연했다. 1960년대 초반 경제개발 방식을 둘러싸고 '국가주도 경제개발론'과 '민간주도 개발론'의 대립, '균형발전론'과 '불균형발전론'의 대립, '내자 동원 전략'과 '외자 의존 전략'의 대립, '수입대체 전략'과 '수출지향 전략'의 대립 등 다양한 의견 차이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차이는 질적 차이라기보다는 양적 차이였고 정책적 차원의 차이일 뿐이었다. 박정희 정권기 경제발전이 부문 간 불균형을 초래한 불균형발전론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지만 『사상계』의 지식인들 역시 '경제발전=공업화'란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농업 부문의 개발을 강조했지만 내용 면에서 공업화론에 기울어져 있었다(김보현 2003, 355-356).

또한 박정희 정권의 외자 도입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그것의 불가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성 역시 인정되기도 했다. 한일국교정상화와 관련하여 "한일회담을 이대로 시켜서 아니 되는 정말 큰 이유는 … 정신적인 데 있다. … 경제 제일이란 소리를 자꾸 하지만 … 필요한 것은 국민의 정신이다. … 설혹 몇 푼의 돈을 구해 왔다 하자. 국민 전체가 일본에 기운으로 눌리는데 어찌할 터인가?"(함석헌 1963, 53-58)라는 반응이 『사상계』의 기본적인 반응이었다. 한일국교정상화의 문제는 외자 의존 전략과 관련한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에 대한 국민감정의 문제였다. 오히려 한일국교정상화를 통해 들어올 자본 때문에 미국으로부터의 원조 감축을 우려하는 모습이 등장하기도 했다(박준규 1965, 54-55). 『사상계』의 지식인들과 박정희 정권의 적대적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은 군정의 연장과 한일협정에 따른 결과이다. 전자는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으로, 후자는 민족주의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졌다. 한일협정 체결 이후 등장한 '민족적 민주주의'의 죽음이라는 구호는 박정희의 배신과 그에 대한 비판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다. 민주주의를 유보하면서 근대화의 길에 박차를 가하기로 한 박정희 정권에 대하여 반민주주의적 정권이라는 비판과 더불어 '반민족적'이라는 비판이 더해졌다. 사실 경제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근대화에 대해 대부분 동의했던 많은 이들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지점에서 '좋은 민족주의'와 '나쁜 민족주의'의 분리가 발생한 것인가? 하지만 적어도 민족주의와 관련하여 그들 사이의 차이보다는 공유 지점이 훨씬 더 많았다.

2) ‘민족경제론’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비판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추구했던 것은 박현채의 ‘민족경제론’과 그것의 ‘대중화된’ 판본으로서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이다.[4] 박현채는 “식민지 종속국에 있어서 외국자본의 지배 영역까지를 포괄하는 지역적 범주로서의 국민경제”와 “민족적 생존 기반으로서 민족경제”를 구별짓고 또한 “민족경제”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국민경제보다 높은 상위 개념”이라고 규정한다(박현채 1978, 140; 1988, 28). 민족경제는 경제적으로 민족주의의 근거가 되는 것으로서 “민족을 위한 힘과 부를 창조하는 과정임과 동시에 장으로서의 민족의 내면적인 생활통일체”여야 하며, “국내적으로 완결된 재생산구조”로 한다고 정의되었다. 결국 민족경제의 확립은 식민지 유제의 청산과 분단의 극복이라는 과제의 해결을 통해 종국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1960~1970년대에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은 내재적 발전론 및 내포적 공업화론과 일정한 친밀성와 유사한 지향성을 통해 남한의 비판적 지식인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었다. 내재적 발전론은 박정희 군사정권의 경제개발계획과 맞물려 로스토우의 근대화론이 지배 담론으로 확산되면서 일

4) 박정희의 근대화론에 대립항으로 존재했던 것이 박현채의 ‘민족경제론’ 그리고 그와 일정한 소통관계 속에서 형성된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이다(김보현 2015). 류동민(2015)은 대중경제연구소에서 펴낸 『김대중씨의 대중경제 100문 100답』(1971)은 박현채가 집필을 주도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으며, 민족경제론의 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류동민 2015, 119). 박현채 개인사의 특이함에 대해서는 김원(2011) 참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종의 대항 담론으로서 등장한 것이다(신주백 2014, 236). 한국사의 내적 전개 과정을 해명하고 세계사적 보편성과 한국적 특수성을 조화시키고자 하는 요구 속에서 내재적 발전론은 조선후기에서 자본주의 맹아를 찾는 작업을 진행했다. 김용섭은 내재적 발전론의 근거로서 조선시대 부농의 존재를 실증하고자 했고, 그것은 식민사관의 타율성과 정체성론을 극복하고 민족사의 주체적이고 내재적인 발전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다(김용섭 1971). 민족경제론은 내재적 발전론과 맞물려 한국의 고유한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작업이었다.

박현채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에 대하여 그것이 국부 및 국민생산의 양적 지표를 증대시켰으며, 경제적 민족주의의 실현, 경제 자립의 기초 확립이라는 가능성을 갖긴 했지만 경제적 민족주의의 실현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을 비판했다. 그는 경제개발계획이 실현해야 할 과제로서 경제적 민족주의의 실현, 경제적 자유 및 국민의 생활권의 보장이라고 보았다(박현채 1978, 200-207). 특히 그는 경제적 민족주의를 통한 경제적 자립이란 "국민경제의 재생산조건을 스스로의 힘으로 장악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리고 경제적 자유의 의미를 근대 초의 자유방임적 의미의 자유 - 영리의 자유와 재산권의 자유 - 에 한정하지 않고 "생활권의 확보"를 강조하면서 "케인즈적 방법의 전개로 투자의 사회화나 공공관리"가 불가피하며 국가의 개입과 관료 통제의 필요성은 물론 "만인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의 참여에 의해 실현되는 자유"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박현채 1978, 37-39). 이렇게 본다면 박현채가 제안하고 있는 '민족경제론'은 박정희의 경제개발계획을 통한 국가주도적인 '경제적 민족주의'와 동일한

선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그는 국민 일반의 생활권 보장이라는 경제적 자유와 국민의 참여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경제적 '민주주의'를 주장하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는 존재했다. 박현채는 박정희 정권에 의한 경제개발이 '경제적 민족주의'라는 기준에서 볼 때도 '자립 경제의 확립'이라는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것을 비판한다. 그간의 국민경제의 발전이 외국자본과 수출에 의존하는 외연적 성장 모형이었기 때문에 국민경제의 불균형에 따른 대외 의존을 심화시켰으며 국민경제의 성장을 위한 자체 축적의 가능성을 추구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외채의 증가와 주요 산업의 외국자본 지배를 가져온 것은 물론 농공업의 동시적 발전, 균형적 발전을 실현하지 못한 점을 비판하고 있다(박현채 1978, 125-129). 따라서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방향은 민족경제의 "자립, 자주를 위한 국민경제=내포적 공업화에 의한 자율적 재생산구조의 실현"이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대중경제연구소 1971, 49-50).[5]

박현채는 1980년대에 들어서 '민족경제론'에 대해 체계적인 서술을 진행하였다. 그는 지역적 개념으로써 '국민경제'와 민족적 생활양식 위에 서는 그리고 민족 생활 기반으로서 민족의 자주, 자립의 경제적 기초가 되는

5) 1970년대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김대중은 자신의 사유들을 '대중경제론'이라는 이름으로 구체화시켰고, 유세 현장에서 배포된 『김대중씨의 대중경제 100문 100답』(1971)의 집필에 박현채가 참여하면서 자신의 사유를 대중화하고자 하였다(김원 2011, 260-264). 이후 1980년대 미국 망명을 거치면서 김대중의 대중경제론 - 박현채를 비롯하여 정윤형, 김경광 등이 참여한 저술 『대중경제론』(1986) -은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으로부터 일정하게 거리를 두면서 개방 경제, 자본의 자유화 등에 대한 낙관주의적 모습을 보인다(이병천 2007).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개념으로서 '민족경제' 개념의 정립을 요구하였다(박현채 1988, 25). 민족경제론은 단지 경제적 측면에 한정되지 않았다. 박현채는 민족경제론의 구성 요소로서 민족적 생활양식 및 민족적 삶, 즉 민족적 감정과 정서에 충실한 구체적인 삶, 그리고 민족 경제에 자기 재생산의 기반을 갖는 민족자본, 민족적인 것이 계급적 프리즘을 통해 표현되는 민족주의, 최종적으로 그 주체로서 '민중'을 구성 요소로 갖는다고 말한다. 민족주의는 민족경제론에서 "그 완성된 형태인 민족적 생활양식의 표현으로서의 자립 경제를 향한 민족적 의지를 설명하는 수단"으로서 자리매김되고 있다(박현채 1988, 62). 박현채는 이러한 민족경제론에 입각하여 박정희정권에 의해 추진된 근대화 및 자본주의 발전에 대해 평가한다(박현채 1988, 79-103). 기본적으로 시민혁명을 결여하고 국민경제와 민족경제의 괴리를 특징으로 하는 식민지 종속형 자본주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한국 자본주의 발전과정은 국민경제의 불균형 발전과 외국자본의 광범위한 진출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전후 민족자본의 붕괴 속에서 원조에 의한 수입대체산업을 위주로 발전해 오던 한국 자본주의는 박정희 정권의 경제개발계획과 함께 외국자본의 광범위한 진출이 이루어지고 국민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의 증대를 통해 국가독점자본주의가 형성된 것으로 인식하였다. 이 시기는 수출입국형의 외연적인 불균형 성장과 국민경제의 대외 의존의 심화 과정이었다. 1970년대 들어서 민간 부문에 독점자본이 형성되지만 경제적 민족주의의 후퇴와 중화학공업 정책의 좌절로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가 심화되었다고 평가한다.

그렇다면 박현채가 주장하는 '바람직한' 민족경제의 구조는 어떤 것인

가? 박현채가 '국민경제'와 구별되는 '민족경제'라는 개념을 통해 주장하고자 했던 것은 '민족적 생활양식'과 '민중'이라는 주체의 문제 설정을 포괄하고자 했다는 점이다. 박현채는 민중이란 "한 사회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다수"라고 광의로 정의하지만 그들이 "직접적인 경제 담당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계급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박현채 1978, 16-18).[6] 박현채에게 '민족적인 것'은 그의 계급론적 시각이 투영된 것으로 민족경제론의 주체로서 민중의 문제 설정에 있었다. 따라서 민족경제론에서는 소수 재벌 중심의 경제성장이 아닌 참여의 문제가 강조되면서 "참여를 통한 소외의 극복"이라는 문제의식이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이나 "노동조합의 직접적인 경영 참여"라는 제도의 제안으로 이어진다(대중경제연구소 1971, 61-62). 그가 전망한 대안 '민족경제'는 한국사회가 국가자본주의의 한 국면 - 민중적, 진보적 개혁 - 을 경유하여 사회주의로 이행 - 민족민주혁명/비자본주의적 발전 - 하는 것이었고, 또한 이러한 이행은 그가 규범화한 민족적 생활양식의 한반도 전체적 회복, 즉 민족 통일과 일체화될 때 달성되는 것이었다(김보현 2015, 136). 이렇게 '민족' 혹은 '민족주의'가 규범적 방식으로 이해되는 것은 박정희 정권에 대항하였던 대부분의 저항적 지식인의 담론의 형태였다.

여기에서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론과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을 비교할

6) 박현채가 1980년대까지도 자신이 마르크스주의자라는 사실과 빨치산의 경험에 대해서 두리뭉실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1970~1980년대 한국사회에서 마르크스주의자임을 공공연하게 내세울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는 있다(박현채 1988, 부록: "민족경제론: 민족민주운동의 경제적 기초를 해명한다" 대담: 정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때, 전자는 외세 의존적인 불균형 성장론이었고, 후자는 민족주의적 균형 성장론이었다는 이분법으로 구분될 수 없다. 박정희 정권 역시 1960년대는 수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포적 성장을 염두에 두는 복선적 공업화 형태를 취하다가 1960년대 후반 수출의 경제성장에 대한 폭발적 기여도를 인지하면서 전환하였다(조석곤 2001, 28). 김일영(2005)의 지적처럼 대중경제론의 내포적 공업화론이 현실감을 결여하고 있으며, 김대중의 정치적 성공은 대중경제론이 비판하였던 조국 근대화론의 대외 지향적 발전 전략과의 화해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지적은 타당한 부분이 있다.[7] 한국 경제발전의 패러다임이 동아시아에서 세계자본주의 분업 구조 속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미국이 설정한 민주주의의 경계(American boundaries)가 있듯이 세계 자본주의가 규정하는 경계 역시 존재하였다. 그러한 의미에서 양우진의 지적처럼,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론은 물론 그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찾고자 했던 김대중의 대중경제론, 박현채의 민족경제론 모두 "자기완결적 자립 경제"에 대한

7) 2000년대 들어서 '한국경제가 글로벌 환경에 깊숙이 편입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립 경제론은 더 이상 현실적 의의를 가지지 못한다'는 장상환(2001)의 주장이나 '민족경제론 사고란 곧 매판·종속과 정체·파국(자본주의 발전의 한계)이라는 고정관념으로 다가올 뿐'이라는 안현효(2008)의 주장처럼 민족경제론의 용도 폐기를 제기한다. 이에 대해 정건화는 한국사회의 토착 담론과 대항 담론으로서의 의의를 강조하고 현실주의적인 '민족주의적 경제학'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민족경제론'을 모색할 것을 주장한다(정건화 2008). 사실 박정희 정권에 대한 대항 담론으로서 민족경제론의 의의 그리고 이후 1980년대 사회구성체 논쟁으로 징검다리 역할을 했다는 의의는 분명하지만 현재의 신자유주의 시대의 대항 담론의 지점과 주체 구성의 측면을 측면에서 다시 '민족주의적 경제학'을 주장한다는 것은 다분히 시대착오적이다.

희망의 산물이었다.[8] 1960년대 초반에서 국민경제의 자립적 구조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빈곤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했던 민족적 열망이 민족주의적 통치성을 형성하였고 그를 통한 민족적 주체의 형성은 결국 이 시기 모두가 공유했던 가치와 규범이자 에피스테메였던 것이다. 결국 한국 자본주의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제 주체들의 문제와 경제 민주주의의 문제가 결합하여 이해될 수밖에 없다. 경제적 민족주의를 통한 조국 근대화와 자립 경제에 대한 욕망은 박정희 정권이든 저항 세력이든 자기 나름의 계획과 전망 속에서 투영되어 전개되었다. 따라서 그러한 길에 대한 평가의 문제는 결국 경제 주체들에 대한 설정과 경제적·정치적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그들이 제시한 길들을 통해 판단할 수밖에 없다.

3. '민족적인 것'을 둘러싼 논의 - 민족사학과 민족문학

이미 1950년대부터 『사상계』는 일본과 식민사관을 타자로 하는 '한국적인 것'에 대한 모색을 시작하였고, 그것은 1960년대 4·19를 경험한 신

8) 양우진은 1970년대 박정희의 중화학공업화 추진의 원계기가 경제개발계획 초기로 거슬러 올라가며,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통한 '자기완결적 재생산구조'를 갖춘다는 생각이 강하게 남아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결국 1960년대 이래 "쁘띠부르조아 민족주의의 자립경제지향 프로젝트는 구체화되면서 자본주의 세계체제가 가하는 조건에 부응하는 민족적 자본주의 건설노선"이 1970년대 지속되는 것이었으며, 박현채 등의 민족경제론 역시 "자기완결적 자율적 재생산구조"에 대한 희망으로 동일한 민족주의 경제학을 표현하였던 것이다(양우진 1994, 63-8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세대에 의해 재전유되었다(김주현 2006, 382-383). 하지만 이승만 시기에는 민족에 대한 기피 현상이 분명하였고, 경제적·정치적으로 '민족적'이라는 수사가 본격적으로 등장한 것은 4·19 이후 1960년대에 들어서부터이다.[9] 5·16 이후 민정 이양에서부터 제시되었던 '민족적 민주주의'는 자유당의 자유민주주의를 비판하면서 4·19에서 제시된 민족주의와 근대화를 결합하여 "효과적인 선거 구호"로 제시된 것이었고, 그만큼 "국민이 원하고 있었던" 것이었다(차기벽 1965, 101). 또한 그것은 서구의 자유민주주의에 대신하여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대안으로서 제시되었다. 하지만 1963년 한일협정과 함께 민주당과 학생 등 반대 세력에 의해 '민족적 민주주의'의 죽음이라는 비판과 함께 그들 사이 대립 전선이 형성되었다. 그리고 3선개헌과 함께 정권의 정당성 위기와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박정희 정권은 민족주의의 새로운 전환을 꾀하였다. 이제 민족주의는 경제적인 것, 경제적 민족주의를 넘어서 사회 전반으로 확장되었다. 1960년대 후반부터 찾아온 박정희 정권의 위기와 그것의 전환을 위해 추구된 유신 및 중화학공업화 그리고 새마을운동 속에서 박정희는 '민족적인 것'에 대한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1968년 문화공보부를 발족시키고 1973년 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여 문화행정 및 문화예술 지원 체계를 확립하였고, 문화재개발5개년 계획(1969-1974), 문예중흥5개년 계획(1974-1978) 등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

9)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을 연구한 양우진 역시 1945~1960 시기는 '민족적 지향이 잠세(潛勢)화된' 시기였으며, 1961년 이후에야 '민족적 자본주의 건설'이 시작되었다고 본다(양우진 1994).

인 문화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기 '한국적인 것'을 둘러싼 문화정책, 문학과 역사학 등을 통해 민족 중흥, 민족문화, 국난 극복사, 자기 긍정적 민족사 등이 다차원적으로 지식 및 상징과 의례 등을 생산하고 전개하였다(김원 2012, 187). 하지만 민족의 역사에 대한 박정희의 시각은 일제 식민사관을 연상시킬 정도로 부정적인 것이었다. 민족의 역사는 사대, 분열, 타율과 모방의 역사였고, 그의 근대화에 대한 열망과 집착은 그러한 부정적 역사에 대한 혐오로부터 비롯된 것이기도 했다(최연식 2007, 47). 이미 박정희는 쿠데타 직후부터 민족의 역사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봉건적 전근대성과 맹목적인 외세 사대 관념을 철저히 배격하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에서 외래사조의 장점을 취택하여 민족의 고유성, 전통, 주체의식을 토대로 신한국관, 신민족 문화관을 확립"할 것을 강조하였다(박정희 1963, 284).

1972년 3월 대구에서 열린 '총력안보를 위한 전국 교육자 대회'에서 박정희는 "국가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국가관에 입각한 교육" 및 "우리 민족의 정통성과 확고한 국가관에 기초를 둔 교육 그리고 우리 민족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을 강조하였다(대통령비서실 1973, 129-136). 이에 따라 박정희 정권에서는 국적 있는 교육을 위한 국가 주도적 역사교육을 강조하였고, 화랑도, 이순신, 세종, 을지문덕, 신사임당 등 다양한 역사적 인물이 강조되면서 그들의 동상을 건립하거나 유적지를 성역화하여 국민에 대한 정신교육에 활용하였다(정호기 2007; 노영구 2004).[10] 또한 민족의 문화유산에 대한 발굴작업도 활발해져 무령왕릉(1970), 천마총(197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황남대총(1973) 등이 발굴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박정 희정권은 국사 교육 강화, 한국학연구센터의 설치, 한국사 연구 지원 등을 통해 국수주의적이고 복고주의적인 '민족 주체 사관'을 내세우면서 국가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자 하였다(박찬승 1994, 340). 이러한 민족주의적 분위기의 고취는 분명 박정희 정권이 스스로에게 민족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자신의 구국적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박정희의 이러한 '민족주의적' 프로젝트에 대항하여 역사학계에서는 '민족'사학이 등장하였다. 해방 이후 이승만 시기 사학계는 일본인 관학자들이 구축한 식민사관의 틀 내에서 사실이나 고증에 치중하는 실증사학이 지배하고 있었다. 특히 이병도는 일제하 식민사학자의 한국사 인식과 근본적 차이가 없이 식민지 잔재의 청산을 거부하고 민족의 대동단결만을 내세웠던 이승만 정권의 지배에 부응하려 했다(이윤갑 1995, 52-53). 실증사학은 연구 시기를 전근대에 집중하였고 사실 또는 지명을 고증하거나 제도사연구에 치중하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실증사학을 주도했던 것은 진단학회와 역사학회였고, 이들에 대해서 록펠러재단, 하버드대학의 옌칭연구소, 아시아재단 등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4월 혁명과 함께 '민족' 담론의 등장은 역사학계에도 영향을 끼쳤고, 특히 한일협정과 함께 식

10) 신사임당은 한국적 현모양처의 표본으로 제시되었고, 사임당교육원은 여고생, 여교사, 여성지도자를 대상으로 박정희 체제가 여성에게 부여하는 이념과 자질을 교육하는 기능을 담당하면서 1970년대 시작된 국가의 발전주의적 젠더 전략의 한 축을 담당하였다(김수진 2008). 또한 화랑교육원은 학생들에게 유신 이념에 충실한 유신적 인간상을 정립시키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등장하였다(최광승 2014).

민사관을 비판하는 민족사학운동이 등장하였다. 1963년 2월호『사상계』의 특집 "한국사를 보는 눈"을 통해 식민사관의 타율성론과 정체성론이 전면적으로 비판되었다. 그리고 식민사관에 대한 극복이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한 새로운 한국사 해석이 전개되었다. 이 시점에서 민족사학이 부딪혀야 문제는 일제 시기의 식민사관과 그와 동반된 식민지 근대화론과 함께 미국에서 유입된 근대화론이었다. 박정희 정권의 자본주의적 발전이 외자 의존형 및 수출 주도형 산업화 정책을 취하면서 자립적 근대화가 아닌 식민지 종속형 공업화의 가능성으로 기울면서 식민지 근대화론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었다. 근대화론은 자본수출을 통한 미국의 제3세계 산업화를 양적 지표만으로 설명하면서 경제발전을 합리화하는 이론으로 간주되었다. 그렇게 되면 근대화의 시각에서 식민지배와 종속적 근대화 모든 것이 정당화되었다.

이러한 근대화론은 물론 식민주의 사학에 맞서 1960년대 후반 한반도에서 내재적 발전론이 등장하였다. 내재적 발전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이루어졌다(박찬승 2007; 이영호 2011). 하나는 식민주의 사학의 타율성론, 정체성론에 대한 비판으로서 한국사의 전개 과정이 한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민족주의 사학이다. 다른 하나는 조선 후기 이래 사회경제적 변화에서 자생적 근대화의 가능성을 찾는 자본주의 맹아론이다. 전자의 대표적 학자인 이기백은 그간 일본학자들에 의해 한국인의 나쁜 민족성으로 제시되어 온 사대주의론, 당파성, 정체성론 등을 반박하고 "한국사의 생생하고 활기 띤 발전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한국사에 대한 새로운 시도와 구체적인 작업을 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행하였다(이기백 1967). 그는 한국사의 체계화를 위해 "왕조 중심의 사관을 하루빨리 청산"하고 "사회적 지배세력의 변천"을 기준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그 성쇠를 발전론적 입장 – "한국사회의 발전사관" – 에서 전개하였다(이기백 1967, 12; 1978, 216-250). 후자의 자본주의 맹아론은 내재적 발전론에 입각하여 조선 후기 경제사에 대한 연구가 확대되어 그 성과들이 나타났다. 김용섭(1971)은 양안과 호적의 분석을 통해 양반층의 증가 현상은 경제력 향상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농법의 개량, 상업적 농업 등을 통해 새로운 농업 담당자층인 경영형 부농이 등장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였고, 강만길(1973)은 상업에서 경강상인, 개성상인 등 사상이 도고를 통하여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다고 보았다.

한국사를 체계화하기 위한 민족주의 사학의 노력은 "민족사를 주체적 입장에서 발전적으로, 세계사의 보편성을 고려하면서 체계화한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김인걸 2017). 역사학계에서 등장한 민족사학운동은 박정희 정권이 3선 개헌과 유신체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사편찬위원회과 정신문화연구원을 통해 확립시키고 주입하고자 한 국가주의 이데올로기로서 민족 주체 사상에 대한 비판의 의미도 지니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내재적 발전론에 기반한 자본주의 맹아론은 이행기 사회구성의 토대를 해명한다는 안목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식민화의 현실과는 유리된, 즉 민족 스스로 근대자본주의로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역사의식이 투영된 선험적 연구라는 비판을 감수해야 했으며, 또한 자본주의 맹아론이 역사적 현실과 괴리된 정체성론의 반면(反面)이 될 것이라는 우려 또한 존재하였다(김정인 2010, 194; 이영호 2011, 256). 또한 민주화 운동 세력

이 박정희의 반민주적 성격에 대한 비판을 수행했지만, 그들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실체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다(이상록 2010, 59). 또한 이러한 역사적 변동, 즉 근대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역사적 주체에 대한 고려 역시 부재한 것이 사실이었다.[11]

내재적 발전론과 자본주의 맹아론에 대한 연구의 영향이 역사학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문학에도 나타났다.[12] 1969년 백낙청은 「시민문학론」에서 조선의 역사에서 시민의식 발달의 미미함을 인정하면서도 3·1운동 이후 한용운, 1960년대 김수영에 의해 이어져온 시민문학의 전통을 새롭게 건설할 것을 요구하였다(백낙청 1969). 그리고 1970년대 백낙청은 본격적으로 – 내재적 발전론에 힘입은 탓인지 – 한국의 토속적 흔적들에서 민족문학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민족문학론을 제기하기에 이른다. 『월간중앙』 1974년 7월호에 발표한 비평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에서 백낙청은 "민족문학의 개념의 타당성 문제는 흔히 세계문학과의 연관성 속에서 제기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적절한 방법인 것

11) 결국 이러한 한계에 대한 비판적 계승의 작업이 1980년대 '민중사학'의 등장을 가져왔고, 다른 한편으로 안병직, 이영훈 등에 의해 '소농사회론' – 소농사회의 발전 → 식민지근대화 → 해방 후 경제발전 – 을 가져왔다는 정반대의 시각과 맞서야 했다(이영호 2011, 257-263; 이영훈 외 2019).

12) 내재적 발전론과 유사한 방식으로 조선후기 문학을 중세 해체기의 문학 혹은 근대문학의 원천으로 보면서 실학파 문학, 서민문학, 여항문학이 등장하였으며, '중세에서 근대로의 이행기 문학'으로 파악하기도 하였다(임형택 1981). 그리고 철학계에서도 윤사순은 실학이 명보다 실을 중시하고 경험론적 인식론을 제시하였으며, 인간을 욕구를 가진 자율적인 인격체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근대 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도 한다(윤사순 199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같다"라고 하면서 민족문학과 세계문학과의 관계 설정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내재적 발전론이 한국 사회의 보편적 발전의 길, 즉 서구적/세계적 보편과의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사실과도 연관된다. 내재적 발전론이 민족주의 자장 안에 존재하듯이, 백낙청의 민족문학론은 말할 것도 없이 그러하였다.[13] 특히 그는 정부가 주도하는 민족문학과 "민족적 양심, 문학적 양심이 요구하는 민족문학"이 거리가 있으며 박정희 정권에 의한 어용적 민족문학에 대항하여 "민족적 위기의식"에 기반한 "반제국주의·반봉건주의 정신을 생명으로 하는 민족문학"을 복원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그러한 '민족문학의 시대'는 이미 19세기 후반에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하였다(백낙청 1975, 35-38).

백낙청은 "민족문학의 주체가 되는 민족이 우선 있어야 하고 동시에 그 민족으로서 가능한 온갖 문학활동 가운데서 특히 그 민족의 주체적 생존과 인간적 발전이 요구하는 문학"을 민족문학으로 규정한다(백낙청 1974, 124-125). 하지만 백낙청은 박정희 정권에 의해 강조되었던 민족문학, 즉 "국민생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애매한 낙관론을 고취하는 문학"과 구별짓기 위해 진정한 민족문학은 "현실로 있는 비참과 모순을 정확히 인식"하고 "다수 민중의 실질적 요구"에 맞추어 전통을 보존 혹은 변혁해야 한다

13) 백낙청의 『창작과 비평』이 197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자기 지향성, 즉 민족주의적 경향을 드러내면서, 1960년대말 유사한 시기에 등장한 『문학과 지성』과 구별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백낙청의 '민족문학론'이 등장하면서 『문학과 지성』은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한다. 『문학과 지성』이 비판하고자 했던 것은 민족주의의 과잉이 가져오는 개인에 대한 억압과 그것의 전체주의적, 파시즘적 경향이었다(송은영 2015). 전후세대로서 백낙청과 4·19세대로서 김현의 차이와 라이벌 의식에 대해서는 김윤식(2013) 4, 5장 참조.

는 점을 강조한다(백낙청 1975, 35). 백낙청의 민족문학론이 박정희 정권의 민족 담론과 구별되는 지점은 '민중'의 존재를 재현하면서 민족의 중심에 민중을 두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백낙청의 민족문학론에서 민중이 주체로서 설정되었다기보다는 '민중' 개념은 '존재로서의 민중' 개념이 실질적으로 무시되고 지식인에 의해 재해석된 계몽되고 지도되어야 할 주체로서 재현되었다(이상록 2012, 120). 그러한 의미에서 1980년대 비평가들이 반성적으로 되돌아본 1970년대의 민족문학론은 계급적 기반을 갖지 못했으며, 이념적으로 '소시민적 민족주의'에 기반한 '소시민적 민족문학론'으로 분류되었다.[14] 이미 1980년대 문학인들에게 민중은 계급적 기반을 가진 세력이었으며, 나아가 민족문학론이 지향해야 할 전망은 민중 지향성을 가진 – 일부는 적극적으로 노동계급의 헤게모니를 관철하는 민중운동을 강조하는 – 민중운동에 기반한 민족문학이라고 여겨졌다. 또한 백낙청은 민족문학의 입장에서 "가장 근원적인 민족 문제는 분단의 현실"이라고 주장하였다(백낙청 1975, 41). 그는 4·19 역시 자유민권·의회민주주의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또한 민족주의의 승리이며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중요한 계기였음을 강조하였다. 박정희 정권이 민족주의적 구호를 통해 4·19의 민족적 각성에 영합한 일면이 있기는 하지만 월남 파병이나 한일협정 등으로 볼 때 4·19와는 완전히 이질적이며 "민족적 민주주의로써 배제하겠다던 외국의 영향력은 이제 전국민의 소비생활과 정신생활에까지 침투"하게 되었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러한 민족주의적 측면에서 이해했을 경우 현재의 과제

14) 최원식·임영일·전승희·김명인. "좌담: 민족문학과 민중문학". 『창작과 비평』. 1988년 1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가 박정희 정권이 부정하고 있는 "민주회복운동을 당면과제로 삼으면서" 나아가 분단시대의 극복이라는 최대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백낙청의 경우는 1970년대나 1980년대나 지속적으로 분단 모순에 대한 끊임없는 강조와 집요한 집착을 보인다고 평가된다.[15] 백낙청이 민족문학론의 핵심이 토속적인 것에 대한 일관된 애착이 있으며, 식민지 또는 반(半)식민지의 농촌이야말로 "제국주의에 의해 왜곡된 개발의식으로부터 민족의 주체성과 삶의 건강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라고 강조했다는 점은 그의 민족문학론의 독특함이자 '민족주의적' 한계일 수 있다(백낙청 1975, 62).[16] 분단과 식민의 극복이라는 과제가 압도함으로써 민족주의적 해결을 고집하려는 그의 민족문학론의 한계인 것이다.[17]

민족사학과 민족문학 모두 박정희의 '민족적인 것'이 갖는 식민주의적

15) 위의 좌담에서 임영일, 김명인의 말. 24-25쪽. 그리고 손호철(1994) 역시 백낙청의 핵심적 문제 설정은 '분단시대'로부터 '분단 모순'을 거쳐 '분단체제'로 변모해 왔다고 평가한다.

16) 백낙청은 "초기에 만들어놓은 이론적 틀을 견고하게 지속"하면서 큰 변화를 갖지 않은 비평가로 간주된다. 「시민문학론」이 나온 후 40여년 동안 백낙청에게 '민족문학'은 여전히 옹호되어야 할 개념으로 남아 있다(조영일 2012, 132; 백낙청, 임규찬 외 1998, 44).

17) 1978년 9월 『창작과 비평』에 실린 고은, 유종호, 구중서, 이부영, 백낙청의 좌담회는 "내가 생각하는 민족문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행한 것이었다. 그 좌담에서 민족과 민족주의는 모두가 동의하는 최고의 원칙으로 자리잡고 있다. 고은은 "민족이란 이념적 가치로도 볼 수 있고 … 어떤 가치로도 거부할 수 없는 거의 거룩한 공동체 단위의 이념"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좌담회의 참석자들은 함석헌이 경고하는 국수주의, 민족주의에 대한 경계에 대해 "냉소적"으로 반응하면서 분단국가로서 민족의 당면 과제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고은, 유종호, 구중서, 이부영, 백낙청, "좌담회: 내가 생각하는 민족문학" 『창작과 비평』. 1978, 13(3).

유산 및 국가주의적 편향성 그리고 비민주성에 대한 비판을 통해 대항 지점을 만들어내려 한 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민족'이라는 주체에 대해서는 모호함이 남았다. 결국 박정희 정권과 민족주의 및 민족적인 것을 둘러싼 정당성의 싸움이었기에 민족주의적 자장으로 벗어날 새로운 주체에 대한 모색이 필요하였다.

4. 저항 그리고 균열된 주체

1974년 3월 29일「동아일보」기사에서 김병익 기자는 "사, 오년 전부터 의식되기 시작한 청년문화는 이미 대학가와 재수로에서 뻗어 명동과 무교동의 기성문화지대로 범람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1970년대 초반 청년문화는 미국과 서구의 '1960년대 청년문화', 즉 1968년 세계 곳곳의 학생운동의 열기와 반전시위, 히피 등의 청년문화에 영향을 받았다(주창윤 2006, 81). 청년문화는 1960년대 말부터 시작되어 1970년대 초반에는 패션, 스타일, 고고장이나 음악감상실 등 소비문화 영역으로 확대되었고 사회 문제화되기 시작하였다. 청년문화를 이끈 대중문화는 음악, 소설,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나타났다.[18] 김병익은 청년문화를 기성세대의

18) 대중 음악의 영역에서는 한대수와 트윈폴리오가 포크 음반을 발매한 1968-1969년을 기점으로 등장하였으며, 문학의 영역에서는 최인호, 조해일, 한수산, 송영 등이 일간지에 소설을 연재하며 대중적 인기를 끌었다. 1970년대 초반 영화는 청년의식을 보여주는 하길종, 이장호, 김호선 감독 등의 작품이다(주창윤 2007, 82-8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무기력한 문화에 대한 반(反)문화로 정의하면서 그들의 힘은 "거짓을 증오하고 허황함을 비웃으며 안일을 비판하고 상투성을 공격하며 침묵을 슬퍼하는데 있"으며 때때로 "극도의 허무주의"와 "순진한 관능과 환상 속을 헤매"기도 하지만 "인간에의 애정, 사회에의 열망, 자유를 향한 뜨거운 염원이 일관되게 흐르고" 있다고 그것의 잠재적인 힘을 평가한다. 그리고 청년문화를 "육당 최남선, 춘원, 삼·일운동과 광주학생운동, 사·일구와 육·삼데모로 연연이 이어온 청년운동이 칠십 년대에 착용한 새로운 의상"이라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청년문화에 대한 사회의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었다. 특히나 청년문화의 주도층과 같은 세대의 대학언론의 평가는 신랄하였다. 「대학신문」은 청년문화가 존재하지만 연원을 알 수 없는 "외국산 빠다에 버무린 깍두기"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고 지적하였으며, 「연세춘추」는 청년문화를 6·3세대의 계승이 아니라 왜곡으로 대학생들이 외래 스타일에만 빠져 있고 비판적 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등 대학 언론들은 전통문화 보존과 민족문화의 창조 등을 강조하면서 민족주의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고 사회참여로서 문화운동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었다(주창윤 2006, 89-91 재인용). 그리고 청년문화의 등장에 대해 박정희 정권은 물론 비판적 지식인들조차 '민족'문화라는 차원에서 그들의 문화를 무비판적이고 퇴폐적인 문화라고 비판하였다(신현준 2004; 주창윤 2007). 1974년 7월 「신동아」에서의 토론 – '유행이냐 반항이냐' – 에서 한완상은 청년 문화의 세 유형을 제시한다(노재봉 외 1974). ① 구조적인 개선을 위해서 행동적 차원에서 부르짖는 청년문화, ② 상징적 차원에서 전통문화를 재편하고 서민문화에서 새로운 것을 찾고자 하는

것, ③ 대중적이고 모방적인 팝컬처가 그것들이다. 첫 번째 유형은 학생운동의 이념 정립 차원의 것을 예로 들면서 그러한 흐름이 세 번째 유형에 대해 비판적인 것은 물론 질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작가 최인호의 경우 세 번째 문화를 상징하고 있으며 첫 번째 유형의 젊은 세대들에게 엘리트주의 혹은 문제의식의 결여, 혹은 최인호 자신이 표현하고 있듯이 '저질 문화'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유신체제가 퇴폐풍조와 외래 문화 추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장발, 미니스커트, 고고장 등을 단속하고, 금지곡 조치, 우리말 쓰기 등을 내세워 민족문화 중흥을 강조하던 것과 연결되었다. 1970년대 박정희 정권은 정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전개했는데, 앞서 보았듯이 그 대표적인 것 중의 하나가 민족문화 중흥정책이었다. 그렇다고 대중문화의 퇴폐성과 오락성은 정권에 의해 무작정 금지되고 거부되었던 것은 아니다. 박정희 정권이 경제개발을 위해 강조하였던 성실, 근면의 이데올로기와 엄숙주의적 사회분위기 – 전통문화에 대한 강조 등 – 와의 대척점에서 일정하게 용인된 점이 있었다(김창남 1998, 96-98). 1975년 긴급조치와 함께 청년문화는 퇴색되어 갔지만, 호스티스영화는 이후 1970년대 말까지 전성기를 구사하였다. 이는 호스티스 영화의 저항성이라는 것이 청년문화의 동력이 거의 소실된 상태에서 최인호 등 몇몇 인물들을 통해 상업적으로 재구성되었기 때문이다(유선영 2007, 17). 그리고 대중들은 무의식적 반항의 차원에서 그러한 대중문화를 향유하였다. 광범위하게 확산되기 시작한 대중문화의 향유자들로 대중, 서민, 소시민의 이름을 가진 이들은 저항성과 건강성을 인정받았던 민중문화와 달리 정당한 평가를 받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못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결국 이후 전개될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투쟁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송은영 2011).[19] 그리고 저항 담론으로 민주주의가 제시되었지만, 그 기저에는 지배의 코드가 숨겨져 있었다. 예를 들어 저항적 지식인들 역시 도덕적 반성이나 고려없이 서구상업주의의 수용을 비판하고 있지만 이 역시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을 지니고 있었으며, 1970년대 유신정권이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단속할 때, 재야 민주화세력들 역시 '민족문화를 도외시하고 외래의 퇴폐 문화에 물든 한심한 젊은이들'로 규정하는 지배 권력의 시선을 고스란히 공유하고 있었다(함석헌 외 1973).

1960년대 태동하여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까지 폭발했던 무정형의 탈영토화된 대중의 욕망은 특정한 코드에 의해 획분되고 서열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한국'과 '민족'으로 재영토화되었다(신

19) 황병주(2002)가 제기한 '대중독재론', 즉 박정희 체제가 욕망을 억압하기보다는 축구에서 보듯 특정 방향으로 분출시켜 집단 소속감과 민족 정체성에 대한 열광을 끌어냈다고 보는 주장은, 유선영(2007)의 지적처럼, 당시 호스티스 영화가 갖는 이중성, 즉 대중의 욕망이 통제된 분출이라는 것과 그것이 갖는 또 다른 이면의 저항성 및 모순, 균열 등을 간과할 수 있다. 〈별들의 고향〉, 〈겨울여자〉 등 1970년대 대중소설에 등장하는 자유분방한 여성은 사회적 관습으로부터 해방된 자유를 표상하지만, 동시에 도덕적 차원에서 창녀에 대한 비판을 통해 도덕적 균형을 찾는다. 1970년대 대중소설의 작가나 독자 대부분이 청년세대로 그것의 문화적 코드는 '자유'라고 할 수 있으며, 사적 영역에서 주체 등장 그리고 가족 혹은 전제로부터 탈주하는 개인의 자유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동시에 "국가가 요구하는 인간형에 동조하도록 자기 규율을 요구하는 체제에 대한 일시적인 회피"라는 방식의 "타협적 균형"을 찾고 있는 것이다(김현주 2003). 그러한 의미에서 '대중독재론'의 제기처럼 호스티스 영화나 당시의 대중소설이 권력의 일방적인 통제나 조절의 산물은 아니라는 점이다.

현준 2004, 66).[20] 결국 짧은 시간 동안 등장하였던 청년문화는 사회의 거의 모든 방면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궁지에 몰리면서 퇴색되어 갔다. 그리고 그 비판의 준거점은 '민족문화'라는 잣대였다. 1960~1970년대의 민족주의라는 규범적 준거가 사회 전반에 공히 존재하고 있었다. 유신체제와 비판적 지식인 그리고 대학생 자신들 역시 이러한 청년문화를 향한 비판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후 무엇이 진정한 민족문화인가라는 것을 둘러싼 문화 투쟁이 전개되었다. 1970년대 대학이나 재야에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은 운동으로서 문화 투쟁이라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결국 민족문화의 복원과 재창조를 둘러싼 정권과 저항 세력의 쟁투는 결국 '민족적인 것'을 둘러싸고 벌이지는 정당성의 문제였다. 즉 누가 더 '정당한' 혹은 '진정한' 민족주의자인가의 문제였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 대한 비판자들이 민족적인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찾아낸 것이 '민중'이었다. 민중은 민족적인 것을 구성하는 주체로서 자리매김되었다.[21] 1970년대 들어서 전태일의 죽음과 광주대단지

20) 젊은 층의 문화는 불온과 퇴폐라는 딱지가 붙었지만, 1968년 김수영이 이어령과의 논전에서 언급하였듯이, "모든 전위문학은 불온하다. 그리고 살아 있는 문화는 불온한 것"이었고, 새로운 세대의 문화의 그러한 특성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신현준 2004, 61에서 재인용). 또한 이들 청년문화는 4·19 시기에 있었던 개인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서서히 1960년대 후반 물질적 욕구가 만족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분출되는 효과를 가졌다고 할 수도 있다. 4·19와 김수영 그리고 1970년대에는 김현으로 이어지는 개인주의적 욕망의 분출은 그 반대항에 존재했던 민족과 국가라는 전체 혹은 공적인 것에 대한 강조의 반발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기에 불온한 것이었고, 공적인 것을 타락시킬 수 있는 퇴폐적인 것이었다.

21) 한반도의 근대 초기에 '민중' 개념이 저항주체이자 집단주체로서 호명된 사례는 신채호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사건 등은 한국자본주의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계기였고, 그와 함께 '민중'이라는 새로운 주체를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1960년대 들어서 '민족'이라는 단일 주체를 호명했다면, 이제 '민족'과 '민중' 사이의 균열이 드러난 것이다. 그 균열은 현실에서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한 새로운 세력, 즉 반공주의와 경제개발이라는 진리 체계를 통해 구성된 민족주의적 통치성을 벗어나고자 하는 흐름을 형성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주체화하기 위한 호명의 기제로서 '민중'의 발견을 의미하였다. 박정희 정권의 민족주의가 '민족'을 '국민'으로 호명했다면, 대항 담론의 민족주의는 '민족'을 '민중'으로 이해하고자 하면서 '민중'으로 호명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그것은 '민중'을 통해 민족주의적 통치성에 균열을 가져오기 시작함을 의미하였다. 민청학련(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명의로 된 「민중·민족·민주선언」은 자신들의 궐기를 "학생과 민중과 민족의 의사를 대변하고 이 땅에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민중적·민족적·민주적 운동"이라고 규정하였다. 1980년대 핵심 가치가 될 삼민주의 즉, 민중, 민족, 민주의 단초가 등장한 것이다. 이들은 부패특권족벌의 치부를 위한 경제정책 시정, 세금 감면과 근로 대중의 최저생활 보장, 노동 악법 철폐와 노동운동 자유 보장, 구속된 모든 애국 인사의 석방 및 유신체제의 폐기와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의 확립, 중앙정보부 즉각 해체, 자립적 민족경제체제의 확립이라는 6개 항을 요구하였다(박명림 2008, 47). 1970년대 주요한 저항의 의제는 민주주의

〈조선혁명선언(1923)〉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북한에서 사용하는 인민 개념과 대비되어 남한에서 1950년대 조봉암, 4·19 이후 함석헌과 민중당 및 『청맥』지에 의해 사용되다가 70년대에 서서히 확장되어 사용되었다(장상철 2007; 황병주 2009).

의 회복과 민중생존권의 보장이었다. 전자는 유신의 등장과 함께 더욱 치열해졌고, 후자는 전태일의 분신 이후 등장한 의제였다.

1960년대 근대화 및 경제적 민족주의에 대한 광범위한 동의는 지배권력이 주도하는 근대화에 대해 국민적 열망 즉 근대화에 대한 욕망을 투영한 것이었다. 하지만 근대화 과정은 모두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었고 근대화의 모순과 한계에 대한 저항의 분출이 1970년대에 이르러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다.[22] 그럼에도 아직까지 1970년대 말경에도 '민중'이라는 말을 쓰는 것을 기피하는 분위기였다. 1976년 11월의 한 좌담에서 한완상은 '민중'이 '인민 대중'의 준말로 오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사회과학적으로 이해할 것을 제안하였다(송건호 외 1976). 또한 민중 개념의 경우 아직까지 특정한 계급관계 속에서 파악되거나 구체적으로 인식되기 보다는 선험적으로 피억압 대중 혹은 반(反)봉건 시민혁명의 완수 등의 사명을 수행할 거대 주체로서 막연하게 설정되었다.[23]

박현채의 경우 민족을 계급적으로 규정된 민중 개념을 통해 이해하고자 하였다. 박현채는 민족경제론를 통해 1970년대 들어서 한국자본주의

22) 1970년대 대표적인 민족문학 시인이었던 신경림의 시 「농무」에서 농민은 "이미 지배권력의 욕망에 뒤섞여 있는 미메시스(mimesis)이자 그 욕망을 자신의 것으로 완전하게 실현시키지 못하는 엉터리 모방자(mockery)"로 나타난다(강정구 2009, 60).

23) 1970년대의 민중 개념에 대해 사후적으로 1980-1990년대의 시각 내지는 엄밀한 사회과학적 잣대를 적용하여 본다면 분명 낭만적이거나 그 범주의 비체계성, 역사에 대한 시각의 일면성 등을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강정구 2006). 하지만 70년대라는 시대적 한계, 즉 이제 막 근대화가 시작된 시점에서의 계급적 미성숙 등과 더불어 박정희의 정권에 대항하여 광범위한 국민적 연대를 형성하기 위한 전술적 노력이라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의 식민지종속성과 국가독점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면서 "진정한 민족주의의 담당 주체는 민중적 범주가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다(박현채 1988, 276). 자립 경제에 기반하면서 민족주의 경제의 주체로서 민중이 상정되었다. 또한 민족사학이 역사발전에 있어서 '민중'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연구를 심화시키면서 민중적 민족주의에 대한 인식이 이루어졌다. 19세기의 동학 등 다양한 농민전쟁에 대해 주목하면서 아래로부터의 근대의 형성과 '민중' 주체를 인식하고자 한 '민중사학'이 등장하였다. 하지만 백낙청이 민족문학론에서 상정했던 '민중'은 명확히 여타의 사회과학자들이 주목하고 또한 현실적으로 등장한 1980년대의 '민중'과는 구별되었다.[24] 백낙청은 1980년대가 1970년대라는 같은 단계의 다른 국면임을 강조하면서 "70년대 민족문학론은 처음부터 민중지향적"이었고 물론 "다분히 추상적이던 민중문학론이 내실을 얻어가는 과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의 새로운 현실을 수용하기 위해 민족문학론의 기본 원리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백낙청 1985, 7). 하지만 1980년대 이후 새로운 세대의 비평가들은 1970년대 백낙청의 민족문학은 '시민적 민족문학'으로서 '민중지향적' 문학이었음에도 '민중이 주체가 되는 문학'을 추

24) 1970년대 민중문학론의 효시로는 1970년에 발표된 김지하의 「풍자냐 자살이냐」라고 할 수 있으며, 이후 신경림의 시 그리고 백낙청의 글 속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다(장상철 2007, 120). 이와 함께 '민중'에 관심을 집중했던 흐름은 안병무의 '민중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민중신학이 가지고 있는 뿌리 깊은 반공주의에도 불구하고 민중운동이라는 실천적 흐름의 형성에 기여한 바는 크다. 특히 민중신학은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박정희 민족주의와의 대결이라는 맥락과 무관하게 세계 신학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김창락 1987; 윤정란 2017).

구한 1980년대의 민중적 민족문학과는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한다(손유경 2015, 42-43). 『창작과 비평』의 1970년대 민중주의는 노동자계급의 당파성과 헤게모니를 강조하는 1980년대의 민중주의와는 분명히 구분된다. 앞서 보았듯이 백낙청의 민중에 대한 사유의 틀은 그의 민족주의적 사유, 특히 분단모순을 중심에 두는 사유에 의해 결정되었다.

박정희 시대를 민족주의적 통치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민족주의가 단지 통치이데올로기 수준에 멈춘 것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주체를 생산하고 그들의 삶을 규율하는 원칙이자 제도, 가치 전반을 형성했다는 점이다. 정권은 물론 비판적 지식인들 역시 민족주의의 자장 안에 있었으며 그를 통해 민족주의적 주체가 생산되었다는 의미이다. 물론 그러한 권력의 망으로부터 탈주하는 새로운 저항 주체들이 탄생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민족주의적 통치성, 즉 권력의 망으로부터 벗어나는 새로운 저항 주체의 형성은 결국 자본주의적 질서에 대한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된 노동자운동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었다.

5. 글을 맺으며

경제발전을 통한 조국 근대화 그리고 자립 경제에 대한 열망은 1960년대 형성되기 시작한 민족주의적 통치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박정희 정권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많은 민주화 세력들도 대항 담론을 구성하면서 그 시대의 민족주의적 자장으로부터 벗어나기는 어려웠다. 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국 누가 더 민족주의적인가 혹은 진정한 민족주의의 담지자인가를 둘러싼 싸움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민족주의적 열망이 만들어낸 자본주의적 경제발전은 결국 민족주의 통치성에 균열을 가져오는 다양한 사회 세력과 이해관계들을 만들어냈다. 1960~1970년대 한국사회는 '국민국가 건설'이라는 과제를 위한 민족주의적 동원의 시기였다. 물론 박현채의 민족경제론, 역사학자들의 민족사학, 백낙청의 민족문학론 등 당시의 대항담론은 그 역할과 관심에서 뚜렷한 차별성이 보이긴 하지만, 민족주의적 통치성 안에 위치하였다. 즉 19세기 후반에 시작된 한반도에서의 국민국가 건설의 과제를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새롭게 재구성해내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동일하며, 민족주의적 가치와 삶에 대한 지향성 등에서 질적 차별성을 찾는 것이 어렵다. 다만 서서히 등장하기 시작한 '민중적' 관점을 통해 민족주의에 새로운 규범적 가치를 부여하고자 하였고, 결국 '민족'의 실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의 문제, 주체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박정희 체제에 균열을 가져오기 시작하였다.

1970년대부터 서서히 등장한 '민중'이라는 개념은 어쩌면 해방 이후 분단의 과정에서 빼앗긴 이름이었던 '인민'의 다른 이름일 것이다. 그나마도 그것의 등장은 조심스러운 과정이었다. '인민', '노동자', '빨갱이' 등등 분단 이후 한국사회에서 '배제'된 용어이자 배제를 위한 용어들이 새롭게 등장하기 시작한 주체에 대한 '호명'을 어렵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기에 '민족'이라는 단어가 그나마 중립 지대에 있었던 것이고 그것을 선점하기 위한 싸움이 1970년대의 시간이었다. 1979년 8월 YH사건, 11월의 부마항쟁, 그리고 1980년 광주민중항쟁을 거치면서 민중은 우리 사회의 변혁

적 세력으로 구체화되기 시작하였다. 이제 1980년대는 '민중'의 시간이 되었다.

참고문헌

강만길. 1973.『조선후기상업자본의 발달』. 고려대학교 출판부.

강정구. 2006. "1970-90년대 민족문학론의 근대성 비판".『국제어문』 287-310.

_____. 2009. "1970년대 민중-민족문학의 저항성 재고(再考)".『국제어문』 46집. 45-68.

고은·유종호·구중서·이부영·백낙청. 1978. "좌담회: 내가 생각하는 민족문학"『창작과 비평』 13(3).

권보드래. 2010. "민족문학과 한국문학".『민족문학사연구』 44권. 197-234.

김대중. 1986.『대중경제론』. 청사.

김보현. 2003. "『사상계』의 경제개발론, 박정희 정권과 얼마나 달랐나?"『정치비평』 상반기. 345-380.

_____. 2015. "박정희정권 시기 저항의 지식-담론, '민족경제론'". 『상허학보』 13집. 125-169.

김수진. 2008. "전통의 창안과 여성의 국민화 - 신사임당을 중심으로".『사회와 역사』 80집. 215-255.

김용섭. 1971.『조선후기농업사연구』. 일조각.

김원. 2011.『박정희 시대의 유령들』. 현실문화.

_____. 2012. "'한국적인 것'의 전유를 둘러싼 경쟁 ".『사회와 역사』 93집. 185-235.

김윤식. 2013.『문학사의 라이벌 의식』. 그린비.

김인걸. 2017. "1960-70년대 '내재적 발전론'과 한국사학".『조선시대 사회사와 한국사 인식』. 경인문화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김일영. 2005. “조국근대화론 대 대중경제론”. 명지대학교 국제한국학연구소 학술대회.

김재준. 1953. “민주주의론”.『사상계』 5월.

김정인. 2010. “내재적 발전론과 민족주의”.『역사와 현실』 77. 179-214.

김주현. 2006. “1960년대 ‘한국적인 것’의 담론지형과 신세대의식”. 『상허학보』 16. 379-410.

김창남. 1998.『대중문화의 이해』. 한울엠플러스.

김창락. 1987. “민중의 해방투쟁과 민중신학(I) : 1970년대의 민중운동과 안병무의 민중신학을 중 심으로”.『신학연구』 28. 69-132.

김현주. 2003. “1970년대 대중소설연구”.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 논문.

김형아. 2005.『박정희의 양날의 선택: 유신과 중화학공업』. 신명주 역. 일조각.

노영구. 2004. “역사 속의 이순신 인식”.『역사비평』 69호. 338-358.

노재봉·이어령·최인호·한완상·현영학·오영환(사회). 1974. “토론: 유행이냐 반항이냐”.『신동아』 7월호.

대중경제연구소. 1971.『김대중씨의 대중경제 100문 100답』. 범우사.

대통령비서실 편. 1973.『박정희 대통령연설문집』 9.

대한민국정부. 1962.『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1966〉』.

류동민. 2015. “박현채의 민족경제론: 민족의 미학화를 넘어”.『진보평론』 64. 114-130.

문지영. 2011.『지배와 저항』. 한겨레신문사 후마니타스.

박명림. 2008. “박정희 시대 재야의 저항에 관한 연구, 1961-1979”.『한국정치외교사논총』 30(1). 29-62.

박정희. 1962.『우리 민족의 나아갈 길』. 동아출판사.

_____. 1963.『국가와 혁명과 나』. 향문사.

박준규. 1963. “미 대한원조는 우리의 혈대(血代)이다”.『사상계』 2월호.

_____. 1965. “굴종의 외교를 이어가려하는가?”『사상계』 4월호.

박찬승. 1994. “분단시대 남한의 한국사학”. 조동걸 편.『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 하. 창작과 비평사. 327-372.

_____. 2007. “한국학 연구 패러다임을 둘러싼 논의: 내재적 발전론을 중심으로”.『한국학논집』 35. 73-117.

박태균. 2007.『원형과 변용: 박정희 경제개발계획의 기원』. 서울대출판부.
박현채. 1978.『민족경제론』. 한길사.
_____. 1988.『민족경제와 민중운동』. 창작과비평사.
백낙청. 1969. “시민문학론”.『창작과 비평』 4(2).
_____. 1974.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민족문학과 세계문학 I』(1978). 창작과 비평사.
_____. 1975. “민족문학의 현단계”.『창작과 비평』 10(1). 35-68.
_____. 1985. “민중·민족문학의 새 단계”.『창작과 비평』 15(3).
백낙청·백영서·김영희·임규찬. 1998. “(회화) 백낙청 편집인에게 묻는다”.『창작과 비평』 봄호.
서은주. 2014. “‘민족문화’ 담론과 한국학”.『권력과 학술장: 1960년대-1980년대 초반』. 혜안.
서중석. 2005.『이승만의 정치이데올로기』. 역사와 비평사.
손유경. 2015. “현장과 육체:『창작과 비평』의 민중지향성 분석”.『현대문학연구』 56. 37-69.
손호철. 1994. “‘분단체제론’의 비판적 고찰. 백낙청 교수의 논의를 중심으로”.『창작과 비평』 22. 316-345.
송건호·안병직·한완상. 1976. “좌담: 민중의 개념과 그 실체”.『월간 대화』 11월호.
송은영. 2011. “1960-70년대 한국의 대중사회화와 대중문화의 정치적 의미”.『상허학보』 32. 187-226.
_____. 2014 “박정희 체제의 통치성, 인구, 도시”.『현대문학의 연구』 52. 35-65.
_____. 2015. “『문학과 지성』의 초기 행보와 민족주의 비판”.『상허학보』 43. 11-46.
신일철. 1961. “소리없는 혁명”.『사상계』. 100호.
신주백. 2014. “관점과 태도로서 ‘내재적 발전’의 형성과 1960년대 동북아시아의 지적 네트워크”.『한국사연구』 164. 193-233.
신현준. 2004. “이장희와 1970년대: 실종된 1970년대, 퇴폐 혹은 불온?”『당대비평』 28호. 49-68.
안현효. 2008. “민족경제론과 신자유주의 시대의 한국경제학”.『동향과전망』 72호. 11-48.
양우진. 1994. “현대 한국자본주의 발전과정 연구: 국가자본주의 국면의 형성과 해체의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경제학박사학위논문.
유선영. 2007. “동원체제의 과민족화 프로젝트와 섹스영화”.『언론과사회』 15(2). 2-56.
윤사순. 1990.『한국의 성리학과 실학』. 서울: 열음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윤정란. 2017.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제3세계 자유 반공주의 전력과 한국민중신학의 태동, 1950-1970년대”. 『역사학보』 236. 41-76.

이기백. 1967. 『韓國史新論』. 일조각.

_____. 1978. “한국사회발전사론”. 『한국사학의 방향』. 일조각

이병천. 2007. “민족경제론과 대중경제론: 민족경제론의 현실적 변용으로서 대중경제론에 대하여(1960년대 말-70년대 초)”. 『사회경제평론』 223-246.

이상록. 2010. “1960-70년대 민주화운동 세력의 민주주의 담론”. 『역사와 현실』 77. 39-71.

_____. 2012. “1970년대 민족문학론”. 『실천문학』 11월호. 113-130.

이영호. 2011. “‘내재적 발전’ 역사 인식의 궤적과 전망”. 『한국사연구』 152. 239-272.

이영훈 외. 2019. 『반일종족주의』. 미래사.

이윤갑. 1995. “한국 현대의 민족사학의 전개와 민중사학”. 『한국학논집』 22. 49-76.

임형택. 1981. “실학문학과 한문단편”. 『한국학연구입문』. 지식산업사.

장상철. 2007. “1970년대 ‘민중’ 개념의 재등장”. 『경제와 사회』 7. 114-138.

장상환. 2001. “박현채 경제학의 현재적 의의”. 『사회과학연구』 19(2). 25-45.

장준하. 1961. “권두언: 5·16革命과 民族의 進路”. 『사상계』 95호. 6월.

정건화. 2008. “민족경제론을 위한 변명: 민족경제론의 계승과 극복을 위한 시론”. 『동향과 전망』 72호. 49-82.

정진아. 2012. “1950후반-1960년대 초반 ‘사상계 경제팀’의 개발담론”. 사상계연구팀. 『냉전과 혁명의 시대 그리고 사상계』. 소명출판. 291-327.

정호기. 2007. “박정희 시대의 ‘동상건립운동’과 애국주의”. 『정신문화연구』 30(1). 335-363.

조석곤. 2001. “민족경제론 형성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그 이론화과정”. 『동향과 전망』 봄호. 8-41.

조영일. 2012. “시민문학, 민족문학, 세계문학. ‘시민-소시민 논쟁’과 「시민문학론」에 대하여”. 『서강인문논총』 35. 125-162.

주창윤. 2006. “1970년대 청년문화 세대담론의 정치학”. 『언론과 사회』 14권 3호. 73-105.

_____. 2007. “1975년 전후 한국 당대문화의 지형과 형성과정”. 『한국언론학보』 51(4). 5-31.

차기벽. 1965. “오용된 민족주의”. 『思想界』 5월.

최광승. 2014. “유신체제 박정희 정권의 애국적 국민 생산프로젝트”. 『한국학연구』 33. 237-275.
최연식. 2007. “박정희의 ‘민족’ 창조와 동원된 국민통합”.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8(2). 43-73.
최원식·임영일·전승희·김명인. 1988. “(좌담)민족문학과 민중문학”. 『창작과 비평』 16(1).
한국기독교협의회. 1984. 『노동현장과 증언』. 풀빛.
_____. 1963. “한일회담을 집어지워라!” 『사상계』. 9월호.
함석헌·안병무·김동길·장준하. 1973. “좌담: 외래문물의 홍수와 민족문화의 위기”. 『씨올의 소리』 27호.
황병주. 2002. “박정희 시대 축구와 민족주의”. 『당대비평』 6. 145-187.
_____. 2009. “1960년대 비판적 지식인 사회의 민중인식”. 『기억과 전망』 21. 110-147.
홍태영. 2018. “국민국가 건설과 민족주의적 통치성”. 『한국정치연구』 27(1). 1-30.
_____. 2019. “민족주의적 통치성과 ‘국민’ 만들기”. 『문화와 정치』 6(2). 101-138.
_____. 2020. “남한에서 국민국가 형성과 보수세력 및 보수주의의 구성”. 『한국정치학회보』 54(1). 111-13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www.kdemo.or.kr KOR

Abstract

The Nationalist Governmentality of the Park Chung Hee Era and Its Counter-Discourses

Hong, Taiyoung
Korea National Defense University

In South Korea, nationalism has consistently been a valuable political resource for both the government and its oppositions. After the April 19 Revolution and the May 16 Coup d'Etat, the nationalist ideology purported by the Park Chung Hee government aimed to realize a strong, prospering nation through modernization, which were goals shared by its liberalist oppositions. As such, this nationalist ideology, especially economic nationalism, was accepted by almost all groups of South Korean society to a certain degree, to eventually govern the people's everyday life – thereby establishing the so-called 'nationalist governmentality.' The counter-discourses formed in resistance to Park Chung Hee's nationalism could be understood largely in two levels. Firstly, there were the criticisms of the South Korean economy built through Park Chung Hee government's economic nationalism and attempts to pursue alternative approaches (Section II). Secondly, there were the criticisms of Park Chung Hee's nationalism and what he understood as national, against which there formed resistance discourses (Section III). Although these resistance discourses were located under the larger umbrella of nationalist governmentality, they began to explore new actors of resistance to create clevages of governmentality (Section IV) during Park Chung Hee's rule. The formation of new actors, the study of new social order, and socio-political movements result in the collapse of Park's regime

■ **Keywords:** Nationalist governmentality, Economic nationalism, Park Chung Hee, National economy, National literature

투고: 2021.9.14. 심사: 2021.10.12. 확정: 2021.10.27.